



# 1920년 조선어 민간신문 창간의 배경과 과정

박용규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

일제는 3·1운동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문화정치를 실시하며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 총독부는 조선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1920년에 민간신문 발행을 허가하고, 그런 신문을 통해 민심을 파악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총독부는 분열과 경쟁을 유발하기에 적절한 신문의 수까지 따져보고 전체적인 구도를 짜서 신문발행을 허가했다. 다양한 조선인 집단이나 개인들은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의도 등을 갖고 신문발행 허가를 신청했다. 총독부는 적극적 협력세력 중에 2개, 소극적 저항세력 중에 1개의 신문발행을 허가했다. 협력세력 중에는 동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쳤던 국민협회에게 〈시사신문〉을 허가했고,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사교활동을 했던 대정친목회에게 〈조선일보〉를 허가했다. 저항세력 중에는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 세력에게 〈동아일보〉의 발행을 허가했다. 당시 잡지의 필자들은 국민협회 기관지 〈시사신문〉과 대정친목회 운영 시절의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다. 다만 창간 다시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족주의적이었다는 평가와 다른 두 신문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핵심어:** 조선어 민간신문의 창간, 문화정치, 〈동아일보〉, 〈시사신문〉, 〈조선일보〉

---

\* ygpark@sangji.ac.kr

# 1.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창간 과정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20년이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이한다. 두 신문은 식민지시기에 창간되어 해방과 분단, 권위주의정권시기를 거치며 영욕(榮辱)의 세월을 보냈다. 일본제국주의와 권위주의정권에 맞선 비판적 언론활동으로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권력의 탄압에 굴복해 친일적이거나 친독제적인 언론활동을 하여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보수 신문으로서 정치적, 이념적 입장에 따라 다른 평가를 듣고 있다.

일제강점기로서만 좁혀 보아도, 두 신문은 ‘저항과 타협 사이’의 활동으로 다양한 평가를 듣고 있다. 두 신문을 민족지로 부르며 항일적 활동을 해왔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제말기 논조의 변질이나 사주들의 친일행위를 들어 친일적 활동을 했다는 비판도 있다(김민환, 1993). 전자의 입장에서는 주로 1920년대의 논조나 일제의 탄압 사례가 강조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1930년대 말의 논조나 사주의 친일단체 참여가 부각된다.

두 입장 모두 소홀히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두 신문의 창간 과정이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간략하게 상이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 정작 두 신문의 창간 과정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1985년 두 신문 사이에 벌어진 ‘민족지 논쟁’은 창간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두 신문 사이의 논쟁이 주로 창간 과정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1985년 창간 65주년을 맞이해 〈동아일보〉에 실린 칼럼에서 조용만(1985.4.1)은 〈동아일보〉는 애초부터 ‘민족주의 신문’으로 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정실업친목회’가 창간한 〈조선일보〉는 ‘실업신문임을 위장한 친일신문’이었다고 표현했다. 민족주의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조선일보〉는 당연히 〈동아일보〉가 자신을 ‘친일신문’으로 출범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선우휘(1985.4.12)가 쓴 칼럼을 통해 “조선일보를 친일 실업인에게, 동아일보를 민족주의자에게 허가했다는 것은 단순화된 후일담”에 불과하며, “정확히 말하면 일제 위정당국은 조선일보를 대정실업친목회를 대표한 예종석에게, 동아일보는 박영효에게 허락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영효가 “일제 당국으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얻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동아일보〉가 “민족주의 신문을 만들라고 허가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웃지 못할 난센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창간 당시 사장이 박영효였던 것을 근거로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친일적 인물에게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조선일보사(1985.4.19)는 일주일 뒤 “총독부는 조선인 가운데 귀족, 지주, 상공인 등 예속 자본을 그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중에서도 일부 토착 귀족, 지주세력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형성된 가장 중추적인 동맹군”이었다고 하고는 “결국 귀족, 지주, 기성 친일 언론인으로 혼합된 층에 허가된 것이 바로 동아일보였고, 상공인 집단에 주어진 것이 조선일보”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총독부가 일제의 ‘가장 중추적인 동맹군’인 귀족과 지주에게 〈동아일보〉를 허가하고, 상공인에게는 〈조선일보〉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동아일보〉도 친일 세력에 의해 창간되었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일보〉가 더 친일적일 수 있다는 점까지 내비친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지 논쟁’은 확전이 가져올 상처를 염려한 두 신문이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며 중단되고 말았다. 동아일보사(1985.4.17)는 “65년을 통틀어보면 잠깐에 불과한 창간 무렵의 경위야 어쨌든 조선일보도 월남(月南)과 고당(古堂)과 계초(啓礎)가 이끈 대부분의 시기는 동아와 더불어 자부할 수 있는 민족지임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조선일보사(1985.4.19)는 “많은 사람들은 두 신문의 창간 때의 친일 시비로 얻어지는 것은 서로의 상처뿐이며, 잃는 것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일 따름이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더 이상 ‘뿌리 논쟁’을 이어가지는 않았다.

‘민족지 논쟁’은 한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두 신문의 ‘뿌리’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통사류의 책(정진석, 1990; 채백, 2015; 최준, 1960)은 물론이고 ‘민족지 논쟁’을 다룬 논문들조차 두 신문의 창간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김유원, 1986; 신흥범, 1985). 1990년대 이후 두 신문의 친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여전히 일제 말기의 친일논조나 사주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만 조명이 이루어졌다. 장신(2010)의 〈조선일보〉 창간 과정에 관한 논문이 그 ‘뿌리’를 집중적으로 추적한 유일한 연구이다. 다만 이 연구도 일제의 신문 발행 허가 의도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다.

1920년에 창간되어 1940년에 폐간되기까지 20년 동안의 두 신문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간 배경과 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창간 당시 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언론지형이나 언론정책의 큰 틀이 일제강점기 내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총독부는 3개 신문을 계속 허용하며 발행 주체를 관리했고, 논조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탄압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조선어 민간신문의 창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방 이후 줄곧 〈동아일보〉가 ‘민족지’로 출발했다고 주장하고, 〈조선일보〉가 ‘실업지’로 창간되었다고 강변해 왔던 것이 타당할지도 밝힐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총독부가 조선어 민간신문의 발행 허가를 결정한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고, 신문발행 허가를 신청한 조선인들의 특성과 목적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총독부가 조

선어 민간신문의 발행을 허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특히 조선어 민간신문 창간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은, 일제강점기 동안의 전체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2) 연구의 시각과 방법

일제는 3·1운동 이후 지배체제 개편 차원에서 ‘문화정치’를 실시하면서 자신들의 지배에 협력할 세력을 ‘육성·보호·이용’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일제는 친일파를 육성해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민족주의세력의 분열을 조장해 이용하기도 했다(강동진, 1980). “제국주의자의 식민지 지배정책은 피지배 민족의 내부에 어용·주구세력을 양성 부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일제는 그들이 지배한 전 기간을 통해서 이 방면에 막대한 정력을 소비”했다(임종국, 1985, 204쪽). “제국주의의 국가 입장에서 보면, 협력자의 확보는 적은 비용으로 제국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이태숙, 1990, 89쪽).

협력은 제국주의의 의도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식민지 내부에 다양한 협력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식민지 협력자들의 유형과 동기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외압에 의한 소극적 협력에서부터 기회로 여긴 적극적 협력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박지향, 2009, 355-361쪽). 식민지의 “협력집단은 자신들의 기존 위치를 유지 또는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제국주의세력을 토착사회에 매개하면서 제국주의의 동반자 역할”을 했다(이태숙, 1990, 89쪽). 또한 “협력자는 개인적 신분 상승이나 부의 축적을 희망하거나, 식민 국가가 경쟁자에 앞서서 자신을 더 많이 보호해주기”를 원했다(Osterhammel, 2002/2006, 108-109쪽).

결국, 식민지 사회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식민지 내부의 ‘협력’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해야 한다. 식민지 조선사회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조선인의 정치운동 사이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김동명, 2006, 8-9쪽). 일제의 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이 ‘저항과 협력’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완범, 2009, 403-404쪽). 특히 “일제와 대립점에 서 있든 혹은 일제 측에 서 있든” 다양한 정치세력들은 “지배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이태훈, 2007, 240-241쪽). 총독부의 지배정책과 조선인의 협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이하 ‘재조일본인’으로 약칭함)의 존재와 역할도 감안해야 한다(이승엽, 2012, 92-93쪽). 총독부는 조선인과 재조일본인 사이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1920년의 조선어 민간신문의 창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가 신문발행을 허가하려고 했던 의도뿐만 아니라 창간을 희망한 세력들의 명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총독부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들의 지배에 도움이 될 만한 세력에게 신문 발행을 허가하려고 했을 것이고, 다양한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신문 창간을 허가해야 하는 이유를 총독부에게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인의 신문 창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일제의 의도나 정치세력들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총독부 및 다양한 세력들이 남겨놓은 조선어 민간신문 창간과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일제의 신문 발행 허가 의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총독부 관계자들이 남겨놓은 각종 문서나 회고록을 활용했다.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의 관계문서는 자료집과 마이크로필름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연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sup>1)</sup> 총독부 정무총감이던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나 경기도 경찰부장 차마 료(千葉了)의 회고를 담고 있는 자료나 일본 수상이던 하라 다카시(原敬)의 일기 등이 신문발행 허가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했다.

정치세력들의 신문창간 과정이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이 발행한 자료나 사이토 마코토 관계문서에 포함된 의견서나 탄원서를 이용했다. 또한 신문과 잡지들의 기사나 신문 창간에 관여했던 인물들의 회고도 도움이 되었다. 당시 조선인들의 신문 창간에 대한 인식은 당시 잡지들의 기사를 주로 활용했다.

## 2. 일제의 신문발행 허가의 결정 과정

### 1) 일제의 신문발행 허가 결정의 배경

1910년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무단통치’를 실시하며, 조선어신문으로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하나만을 남겨놓았다. 3·1 운동으로 인해 일제는 지배정책을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바꾸었다. 문화정치의 실시는 일제가 식민지 지배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좀 더 효율적인 지배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했다(박경식, 1986, 196-197쪽). 무엇보다도 문화정치는 내지연장주의를 토대로 하여 협력세력을 육성하는 한편 부분적으로 유화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총독부는 문화정치 실시에 따른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 민간신문의 발행을 허가하겠다고 했다. 조선어 민간신문의 허용은 ‘문화정치의 표상’처럼 제시되었다(이민주, 2011, 43쪽).

---

1) 일부 내용을 담은 〈재등실문서(齋藤實文書)〉 전17권이 국내에서도 영인본(고려서림, 1990)으로 출간되었다. 영인본 자료를 인용할 때는 권수와 쪽수만 밝힐 것이다. 영인본에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은,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의 자료를 복사해 들어온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필름은 크게 ‘서류의 부(書類の部)’, ‘서한의 부(書翰の部)’로 나뉘어 있다. 마이크로필름안의 문서는 각각 마이크로필름 번호와 서류 번호를 밝힐 것이다.

3·1운동 직후 총독부 기관지 외의 신문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언론정책에 대한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동경대 정치학과 교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는 3·1운동 이후 조선통치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중에서도 “조선인의 언론을 인정하는 것이 초미의 급무”라고 주장했다. <중앙공론> 1919년 6월호에 실린 ‘조선의 언론자유’라는 글에서 “조선에서는 적어도 내지에서와 동일한 정도의 언론자유는 부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야만 ‘조선인의 적나라한 감정’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규수, 2009, 312-317쪽). <도쿄아사히신문(東京朝日新聞)> 경성특파원 다치바나(橘破翁)도 1919년 7월 23일자 ‘극단적인 언론탄압’이라는 기사에서 조선인의 언론이 없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박인식, 2007, 13쪽).

조선인 스스로 발행하는 신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총독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는 물러나며 작성한 ‘사무인계 의견서’의 마지막 장에서 ‘언론집회의 억압을 완화할 것’이라는 제목아래 “언론·집회의 억압은 종래 약간 혹독했던 것 같다. … 차제에 2-3개의 한글신문의 간행을 허락하고 이것을 민심의 통일과 시정(施政)의 선전용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齋藤實文書>, 1권, 400-402쪽). 하세가와 총독체제에서 내무국장을 맡고 있던 우사미 가츠오(宇佐美勝夫)도 진학문에게 신문발행을 허가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동아일보>, 1970.4.1, 11면). 일본의 하라 수상도 1919년 10월 2일 송병준이 찾아와 만났을 때 ‘조선어신문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을 표했는데(原奎一郎, 1950, 342쪽), 그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미 조선인의 신문발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박인식, 2006, 44쪽).

사이토 총독도 경성에 부임한 다음날인 1919년 9월 3일의 훈사에서 ‘민의창달’을 위해 언론 통제를 다소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齋藤實文書>, 1권, 476쪽). 송병준은 1919년 9월 24일에 작성한 ‘조선문 신문지 발행원서’에서 총독의 ‘언론에 대한 불간섭 선명(宣明)’ 이후 신문창간이 가능해지면서 유식계급은 이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書類の部, MF 102-16). 사이토 총독의 입장 발표 이후 논의를 거쳐 총독부는 조선인들로부터 신문발행 신청을 받았다(<경성일보>, 1919.10.11, 2면).

사이토 총독이 신문발행 허용 방침을 밝히고 나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었고 총독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 미즈노 정무총감은 “각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들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들은 조선인의 기분을 알기 위해서는 단지 총독부 기관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했고, 조선인 사이에 어떤 공기가 흐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소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안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라면 오히려 이를 인정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어신문을 허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 특히 언제까지나 조선인들에게만 신문 발행을 금지하는 것은 주위의 눈을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그대로 밀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어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 불을 지피는 데 굴뚝이 없으면 언젠가 가마가 과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굴뚝이 있어서 연기가 굴뚝으로 잘 배출되면 그 과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총독부가 조선어신문을 허용했던 것은 바로 굴뚝을 만들어준 것과 같은 격이고, 조선의 긴장된 공기를 완화하는 데 아주 좋은 분출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朝鮮行政編輯總局, 1937, 208-209쪽).

미즈노 정무총감은 조선인의 신문발행 허가 배경으로, 신문발행이 조선인 사이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언론자유를 허용한 것처럼 홍보하며, 조선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경기도 제3 경찰부장 치바 료(千葉了, 1925)도 “한글신문의 간행은 조선 민중의 불평을 완화할 안전판이며, 민심의 귀향(歸向)을 알아낼 바로미터”(147쪽)라고 주장했다. 치바 경찰부장이 표현한 ‘안전판’과 ‘바로미터’라는 두 단어로 조선어 민간신문 허가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사이토 총독이 <동아일보>가 허가된 뒤 ‘일본인 상인’들이 항의하자 “동아일보는 조선민족의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개스를 배출시키는 굴뚝이야. 개스를 배출시키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서 끝내는 폭발이 되거든”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동아일보사사 편찬위원회, 1975, 74쪽).

총독부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조선어신문 발행 허가 방침을 정하고도 일부의 반대로 다소 주저했지만, 제한된 범위 내의 언론자유 허용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허가를 진행했던 것이다. 미즈노 정무총감이 “각계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근본적인 치안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라면 이를 인정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주장을 경무국 고등경찰과장 시라카미 유키치(白上佑吉)도 했다.<sup>2)</sup>

동아일보를 한다는 청년들이 장래 조선의 치안을 소란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2) <동아일보사사> 1권에 실려 있는 시라카미의 이 ‘술회’는 출처가 나와 있지 않다. 진학문이 “시라카미가 한 녹음을 들으니”라고 했던 것을 보면(<동아일보>, 1970.4.1, 11면), 일본의 ‘우방협회’와 ‘중앙일한협회’가 ‘조선총독부관계자’들의 과거 경험을 녹음했던 자료를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가쿠슈인(學習院) 대학 동양문화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녹음 자료 중 일부는 출간되었는데, 출간된 자료 중에는 시라카미가 강술한 내용은 없고, 치바가 강술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이규수, 2005).

중심인물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인물들을 항상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물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적을 알아야 이쪽의 방비책도 쓸 수 있을 줄 압니다. 저의 정보망만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완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을 허가함으로써 그들의 동정을 낱낱이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아 놓아야만 일조(一朝) 유사시에 일망타진하는 경찰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간이든 발행정지이든 마음대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신문을 허용하는 것은 백 가지 이득이 있을지언정 한 가지 해도 없을 줄 압니다. 각하, 두려워하실 것 없이 제 책임하에 신문허가를 내려주십시오(동아일보사사 편찬위원회, 1975, 74-75쪽).

시라카미 고등경찰과장의 주장처럼, 지하신문이 활발하게 발행되던 상황에서 합법적인 신문을 허용해 “수면하의 비밀활동을 수면위로 부상시켜 단속을 쉽게 하기 위한” 의도도 작용했던 것이다(이연, 2013, 294-295쪽). 미즈노 정무총감은 “총독부는 신정책으로서 언론억압을 완화했고, 신진기에 지식인들의 집단인 동아일보를 허가했는데, 이는 일본의 조선인 탄압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일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다(朝鮮行政編輯總局, 1937, 211쪽). 이렇듯 일제는 신문발행 허가가 민족운동 세력을 ‘일제 지배체제 내로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있다고 보았다(김경택, 1998, 57쪽). 일제는 신문 발행을 허가함으로써 “조선인의 환심을 사는 한편 그들에 의해 유도된 공개적인 언론을 통해 조선인의 동태 파악과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던 것이다(최민지, 1978, 42쪽).

조선인의 신문 발행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미즈노 정무총감에 의해 발탁되어 새로 조선으로 부임한 ‘본국형 관료’들이었는데, 이들은 조선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지닌 ‘현지형 관료’와 여러 가지로 차이를 보였다.<sup>3)</sup> 본국형 관료가 동화주의를 내세우며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현지형 관료와 가장 큰 차이였다(윤해동, 2010, 249-250쪽). 이런 정책으로 인해 총독부와 재조일본인은 대립과 갈등을 겪었는데(이승엽, 2012, 103-108쪽), 형평성 차원에서 조선인에게도 신문 창간을 허용하겠다는 정책도 재조일본인의 반발을 샀다. <朝鮮及滿州(조선과 만주)>를 발행하며 재조일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던 사쿠오 순조(釋尾春苐, 1920)는 조선어신문이 ‘독립적 기분을 고취’해서 “조선인의 사상악화와 불령선인의 발호”(4쪽)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조선인의 신문 창간

3) 윤해동(2010)은 조선총독부의 관료를 ‘본국형 관료’와 ‘현지형 관료’로 나누었는데, 이는 이형식(2006)이 ‘신래종’과 ‘재래종’ 관료로 나누었던 것을 변형한 것이다.



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재조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재조일본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독부는 한국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거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항적 신문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기에는 지배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논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 있었다(이민주, 2011, 45쪽). 또한 총독부의 시정을 알리는 데 활용하려면 당연히 협력적 신문들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신문발행 허가 방침을 정한 이후 총독부는 몇 개의 신문을 허가할 것이며 또 누구에게 허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대정친목회의 한상룡은 “다수의 청원자가 나오고 각 방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 총독부에서도 이를 처리하는 데 곤란을 겪었던 듯하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한익교, 1941/2007, 183쪽).

## 2) 조선인의 신문발행 허가 신청

### (1) 적극적 협력세력의 신문발행 허가 신청

3·1운동 이후 과거에 비해 “개방된 공간에서 조선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이태훈, 2007, 240쪽)하기 위해 총독부에 적극 협력하던 ‘친일 진영’에서는 신문 창간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동화주의를 표방하던 민원식은 1919년 8월 1일에 협성구락부를 결성했다. 민원식은 대한제국 시기에 이미 <위생신문>과 <시사신문>을 발행했던 경험이 있었기(정진석, 1990, 213쪽) 때문에 처음부터 동화주의의 선전을 위해서는 신문 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박용규, 2015). 민원식(1920)은 “종래 민간에 신문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소요발발전에 민족자결운동같은 불령사상의 유입을 지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39쪽)고 하며 민간지 창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성구락부는 사이트 총독이 부임하기 전에 다른 신청자들보다 먼저 “주의 선전, 사회 선도를 위해 기관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19년 8월 26일에 신문 발행 허가를 신청했다(國民協會本部, 1921, 11쪽). 총독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기도 전에 협성구락부는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총독부 경무국(1919.10.18)은 이들이 “민간과 관한 사이에 자기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문지의 경영을 기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성구락부는 3·1운동 이후 가장 먼저 결성된 친일단체로서 1920년 1월 18일에 국민협회로 개편되면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쳤다. 국민협회는 창립취지문에서 조선과 일본이 “지금은 합체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신일본주의를 표방하며 조선인의 참정권을 주장했다(國民協會本部, 1921, 21-22쪽). 국민협회는 1920년대 초의 최대 친일단체였는데,<sup>4)</sup> 회장 민원식은 상해임시정부가 처단해야 할 ‘매국적’(賣國賊)이라고까지 비판했던 인물이다(<독립신문>),

1920.2.5, 1면). 국민협회 간부들은 일본 유학을 경험했거나 하급 관료를 거친 친일파들이었다(松田利彦, 2004, 141쪽). 민원식(1920) 스스로 대부분의 회원들은 생활이 어려워 “어떤 사람은 소위 신일본주의자 일파인 국민협회와 시사신문에 모인 무리는 모두 주의보다도 오히려 ‘뺑’을 위해서 모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지가 모두 자산계급이 아니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38쪽)라고 밝힐 정도였다. 국민협회가 신문을 창간하려고 했던 것은 일차적으로는 동화주의의 선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회원들의 생계 마련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

1916년 11월에 결성된 대정친목회는 ‘사교와 풍속 교화’를 통한 ‘내선융화운동’을 전개했지만, 3·1운동이 발발하고 회장 조중응이 1919년 8월 25일에 사망하여 그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장신, 2010, 297-298쪽). 대정친목회는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만회책’으로 ‘신문발간’을 희망했는데, 신문발행 허가를 위해 한성은행 지배인이자 대정친목회 평의장인 한상룡이 나섰다. 한상룡은 1919년 11월 6일에 사이토 총독과 아카이에 아쓰시(赤池農) 경무국장을 만나 ‘대정친목회의 이름’으로 ‘실업계 신문’을 내겠다고 하여 찬성의 뜻을 얻어냈고, 11월 27일 미즈노 정무총감을 만나 신문 발행을 허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한익교, 1941/2007, 182-183쪽). 한상룡은 신문발행의 명분으로 대정친목회의 선전활동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대정친목회는 조선인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3·1운동 이전의 유일한 친일단체였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활동하지 않는 사교기관이었기 때문에 결성과 활동이 가능했다. “대정친목회는 경성 주재 일본인과 조선인 ‘지식자산계급’의 합동단체로서 총독부의 지배정책을 지지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총독부에 구하는 일종의 ‘관민간 접촉의 장’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회의 회원 전체가 특정의 정치 이념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김동명, 2005, 223-224쪽). 대정친목회는 귀족과 경제인 등을 위주로 “다양한 직업군들로 형성된 경성지역 유지들의 결합체”였기 때문에(장신, 2007, 371-375쪽) 〈조선일보〉의 창간에는 경제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친일 진영에서도 개인적으로 신문 발행을 허가받으려고 했던 인물들이 있었다. 송병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대정친목회가 신문 창간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별도로 신문발행 허가를 신청했다.<sup>5)</sup> 송병준은 대한제국 시기에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 사장을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

4) 국민협회로 개편하던 1920년 1월에 회원수가 약 100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8월 약 400명, 1921년 1월 1,694명, 같은 해 7월 약 6,000명으로 늘어났다(松田利彦, 2004, 137쪽).

5) 송병준은 대정친목회 활동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한제국시기에 ‘친일 경쟁’을 벌였던 이완용과의 대립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다(김종준, 2010, 267-268쪽). 대정친목회 결성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던 조중응은 ‘이완용의 수족’으로 알려져 있던 인물이고(이용창, 2012, 351쪽), 이완용 본인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병준은 대정

에 신문 발행에 관심이 컸다. 그는 총독부의 '신정(新政)에 순응'하고 '일한(日韓)병합의 대의'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신문을 발행하겠다고 하며, 창간준비 예산으로 25만원을 책정한 계획서를 총독부에 제출했다(〈齋藤實文書〉, MF 102-16). 그는 계획안을 내고 일본에 가서 1919년 10월 2일에 하라 수상을 만나 '조선어신문 발행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수상은 동감을 표하며 미즈노 정무총감과 협의하라고 대답했다(原奎一郎, 1950, 342쪽). 미즈노 정무총감은 1919년 11월 22일에 하라 수상을 만나 송병준과 신문발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고했다(原奎一郎, 1950, 396쪽).

민원식과 쌍벽을 이룰 정도의 '직업적 친일분자'였던 선우순도 신문 창간에 관심이 있었던 듯하다(〈齋藤實文書〉, 14권, 23-24쪽). 그는 평양 출신의 전도사로 3·1운동 직후 독립운동을 반대하는 '배역유세단(排逆遊說團)'에 참여해 활동했고, 하라 수상에게 내선동화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통치책을 건의했으며, 1920년 10월 26일에 평양에서 대동동지회라는 친일단체를 결성했다(이태훈, 2007, 235-237쪽). 선우순도 민원식과 함께 상해임시정부가 처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던 인물이다(〈독립신문〉, 1920.2.5, 1면). 이렇듯 협력세력내에서도 가장 적극성을 보인 인물이나 단체들이 신문발행 신청에 큰 관심을 보였다.

## (2) 소극적 저항세력의 신문발행 허가 신청

3·1운동의 여파로 저항세력의 대부분은 감옥에 갇히거나 망명을 했다.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던 '소극적 저항세력' 또는 '타협적 저항세력'(이완범, 2007) 내에서도 신문 창간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1919년 6월경 총독부 내부에서 신문발행 허가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간준비에 나섰다. 총독부 조선어 기관지 〈매일신보〉 편집장이던 이상협은 총독부 영어 기관지 〈서울 프레스(The Seoul Press)〉 사장인 아미가타 이소오(山懸五十雄)가 조선어 신문 발행 허가 방침에 대해 '귀뜸' 해주지<sup>6)</sup> 1919년 6월 말에<sup>7)</sup> 〈매일신보〉를 퇴사하고 최남선이 하던 '신문관(新文

---

친목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별도로 신문발행 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6) 당시 〈매일신보〉에서 함께 근무했던 남상일이 들었던 것을 훗날의 좌담회에서 얘기한 것이다(〈동아일보〉, 1970.4.1, 11면).

7) 1919년 7월 1일에 이상협과 윤백남의 송별회를 해주었다는 기사를 통해 이상협이 6월말 경 퇴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협의 퇴사 사유는 단지 '일신상 사정'으로만 나와 있다(〈매일신보〉, 1919. 7.4, 2면). 이상협이 1919년 8월 28일 퇴사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것은 8월 28일까지 〈매일신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정진석, 2005, 91쪽, 355쪽).

館) 사업을 도우며 신문창간 준비를 시작했다(유광열, 1960, 215쪽).

일본인 발행의 <평양일일신문> 조선어판 주간을 지냈던 장덕준도 동경에 머무르면서 신문 창간을 준비했다. 당시 동경에서 장덕준을 만났던 김준연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그 후(3·1운동 후: 필자) 수개월을 지나서 동경 우리 기독교청년회 간사직에 있다가 병으로 귀국하였던 장덕준씨가 다시 동경으로 와서 내 숙소로 나를 찾아왔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니, 금후에는 대중을 고무 계몽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하는 데는 신문을 경영하는 것이 첩경이 될 것이다. 그런즉 그대가 금반 하기방학 시에 귀국하거든 그 점에 유의하여서 자금면이며 기술면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리하기를 약속하고 귀국하였다(〈동아일보〉, 1960.4.1, 3면).

김준연의 회고대로 3·1운동이 수개월 지났고 하기방학 전이었다면, 장덕준은 이미 1919년 6·7월경부터 신문창간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덕준은 ‘대중 계몽’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문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사이토 총독의 부임 이전에 신문 창간에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사람이 <오사카야사히신문(大阪朝日新聞)> 경성지국 기자였던 진학문이었다. 그는 우사미 내무국장을 만나 “신문발행을 허가할까요 안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다같이 합쳐서 하면 좋을 텐데”라고 대답해서 “아하 이자들이 허가할 의향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동아일보〉, 1970.4.1, 11면).

세 사람 중에 이상협과 장덕준은 동경에서 만나 신문 창간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준연은 아무 성과도 없이 하기방학을 마치고 동경으로 돌아온 후 장덕준이 다시 찾아와 “지금 동경에 매일신보 관계하던 이상협씨 등이 와 있어서 그분들과 신문제작에 관한 의논을 하여 보았다. 그러나 남은 문제는 조선총독부에서 신문발행 허가를 얻는 것과 자금모집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회고했다(〈동아일보〉, 1960.4.1, 3면). 계기가 무엇이었던지는 몰라도 동경에서 이상협과 장덕준이 만나서 신문발행에 힘을 합치기로 했던 것이다.

또한 이상협은 최남선의 동생으로, 김성수 운영의 중앙학교 교장으로 있던 최두선에게 “신문경영의 재정을 위하여” 김성수의 ‘협력 의향’을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다(유광열, 1960, 215쪽). 최두선은 “이분들(유근과 이상협: 필자)이 권유하고 내가 중간에서 심부름한 셈이지요. 김성수씨에게 설명도 해드리고 요새로 말하면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이상협씨가 만들어 온 것을 말해드렸지요. 그러가지고 매일 저녁같이 그 얘기를 해서 결국 김성수씨도 솔깃해졌어요”라고 회고했다(〈동아일보〉, 1960.4.1, 4면). 이상협은 최두선을 통해 김성수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상협이 ‘장덕준과의 논의’와 ‘김성수에 대한 설득’ 중 어느 것을 먼저 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어렵지만 대략 1919년 7월경부터 이상협과 장덕준 등이 모두 김성수와 연결되어 신문발행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만은 확실하다.<sup>8)</sup> 총독부를 상대로 해서 신문발행 허가를 받는 일에 앞장선 사람은, 총독부 기관지 출신으로 총독부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가능했던 이상협이었다. 이상협이 신문 발행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여러 방면으로 유지들의 물론(物論)에 화모(和謫)하여 갖가지로 준비공작을 하고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하몽(이상협: 필자)을 지도하는 선배도 많았다. 그러나 관변 또는 준관변과 절충하여 준비공작의 길을 닦기는 하몽이었다. 그러는 중에 재등 총독은 왔다. 부임후 얼마하지 않아 정중한 소개로써 만났다. 아마 재등 총독이 따로 만나는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이었을지 모른다. 그때 하몽은 민심의 동향의 전면을 정당히 표현하는 민간 신문기관은 조선민중의 요구인 동시에 총독정치에도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 포부를 말하였다. 재등 총독은 일언에 ‘요로시이테쓰(중소이다: 필자)’라고 응하였는 것이다(백악산인, 1938, 44쪽).

이상협은 사이토 총독 부임 이전부터 총독부 관리들을 만나 설득하다가 부임 이후에는 직접 총독을 만나 신문발행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과정에 대한 비슷한 증언은 많은데, 모두 이상협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이 그에게 들었다고 하는 것들이다. 유광열은 이상협이 사이토 총독에게 “독립까지는 주장하지 않더라도 조선사람이 일본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라고 하자, 사이토 총독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동아일보〉, 1970.4.1, 11면). 김을한도 이상협이 “독립운동은 별 문제로 치고라도 우리는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는 총독부에서 알아야 할 것이므로 신문을 내려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김을한, 1971, 34-35쪽). 홍종인도 이상협이 총독에게 “이 사회가 움직이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그래야 움직이는 꼴을 알고서 당신네들도 무슨 통치를 한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설득했다고 했다(고명식 외, 1987, 294-295쪽). 이 같은 얘기들은 이상협이 〈동아일보〉 창간 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

8) 동아일보사측 자료들이 모두 1919년 7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동아일보사사 편찬위원회, 1975, 69쪽; 인촌기념회, 1976, 175쪽). 이상협이 6월말 〈매일신보〉 퇴사 이후 창간 준비에 뛰어 들었다는 점에서도 7월경부터 여럿이 함께 신문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장덕준은 김준연에게 사이토 총독의 비서과장 모리야 에이후(守屋榮夫)에 대한 요시노 교수의 소개장을 받아서 귀국한다고 하며<sup>9)</sup> “신문 허가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960.4.1, 3면). 장덕준은 이상협과 신문 창간에 관해 논의한 바 있지만, 신문발행 허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계속 신문발행을 추진하려고 했는지<sup>10)</sup> 총독부측 인사들을 계속 접촉하려고 했다. 진학문(1975)은 사이토 총독이 부임한 이후 다시 “신문사 하나 허가해 달라”고 했더니 역시 “당신네들 다 같은 조선인들이니 같이 신문을 하는 게 어떡냐”(76쪽)는 대답을 들었다.

이상협, 장덕준, 진학문 등의 세 사람 외에도 신문발행을 시도한 사람은 더 있었다. 진학문은 “장도빈씨라는 분도 신문을 하나 하자”고 했고, “유근 선생과 몇 분이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960.4.1, 4면). 장도빈은 신문 발행을 위해 노력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물러섰던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중앙학교 교장을 지낸 유근의 경우 스스로 신문 발행을 시도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신문 창간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는 최두선에게 김성수의 협력을 권유하도록 했다(〈동아일보〉, 1960.4.1, 4면). 유근은 〈동아일보〉 창간 당시 편집 감독으로 참여했다. 안희제도 부산을 중심으로 신문발행을 시도했지만 지방신문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듣고 입장을 바꾸어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했다(채백, 2012, 111-112쪽).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신문발행 허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상협과 김성수 등이 협력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었고, 결국 1919년 10월 9일에 신문발행 허가 신청을 했다.

〈동아일보〉 창간 준비 과정에는 친일단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민족운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다양한 인물들이 합류했다. 이상협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출신이고, 장덕준은 일본인 발행 〈평양일일신문〉에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진학문은 〈오사카아사히신문〉 기자였다. 김성수도 경성방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 설립에 조심스러웠고 많은

9) 요시노 교수는 조선인 유학생들과 가깝게 지냈으며(이규수, 2009, 312-313쪽), 모리야 총독부 비서과장의 ‘동향의 지기’였다(松田利彦, 2008, 229쪽). 모리야 비서과장은 사실상 ‘조선총독부의 넘버3’로서 직급에 비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이승엽, 2012, 106쪽).

10) 장덕준이 〈관서신문〉이라는 제호로 신문발행을 하려고 했었다는 기록도 있다(동아일보사사 편찬위원회, 1975, 68-69쪽).

11) 조좌호(1996)는 장도빈이 “동아일보의 발행을 결심하고 동분서주 끝에 그 내락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양도하라는 교섭을 받아 ‘목적이 같으니 누가 경영하여도 상관없다’고 하며 서슴지 않고 양도”(22쪽) 해주었다고 했다. 장도빈이 신문 창간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신문 제호는 〈서울신보〉였고, 내락까지 받았던 건 아니었다(동아일보사사 편찬위원회, 1975, 74쪽). 유광열(1969)은 장도빈이 발행하려고 했던 신문의 제호가 〈민중일보〉였다고 주장했다(259쪽).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박영효는 일제의 강점 직후 후작 작위를 받았던 인물로, “신문발행의 허가가 용이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동아일보사사 편찬위원회, 1975, 71-72쪽) “일본인과의 접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장으로 추대되었다(유광열, 1960, 215쪽). 이들은 총독부를 상대로는 ‘민심 파악’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부적으로는 대중들을 계몽해 ‘실력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신문발행을 추진했던 것이다.

### 3. 총독부의 신문발행 허가와 조선인의 반응

#### 1) 총독부의 신문발행 허가의 결과

신문발행 허가 신청서 제출이 이루어질 무렵인 1919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조선인 명망가나 유력자’가 참여한 ‘13도 대표에 대한 시정설명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19개조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이었다(이승엽, 2012, 99-100쪽). 기대가 컸기 때문인지 경성에서만 조선어신문의 신청이 10여개나 되었는데, 총독부 관계자는 ‘사회정책상 신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성일보〉, 1919.10.11, 2면). 이상협과 김성수 그룹, 국민협회, 대정친목회 외에도 7개 이상의 신문발행 신청서가 들어왔던 것인데, 장도빈, 송병준, 선우순 등이 냈다고 가정해도 나머지 4개 이상의 신청서를 누가 제출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미즈노 정무총감은 ‘신문의 출원’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심의중이라고 하며 적절한 시기에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성일보〉, 1919. 11.27. 2면).

총독부가 몇 개의 신문을 누구에게 허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문발행 허가를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독부 당국자에게 협상이나 청탁을 해야 했다.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만 신문발행 허가를 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이토 총독의 부임 초기(1910년 8월-1921년 말) 신문발행에 관심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의 사이토 총독의 면회수는 선우순 46회, 송병준 33회, 한상룡 24회, 박영효 20회, 민원식 19회, 진학문 7회, 이상협 3회로 나타났다(강동진, 1980, 169-170쪽). 민원식과 송병준이 모리야 총독 비서관장을 만난 횟수도 각각 33회(서한 5통)와 6회(서한 1통)였다(松田利彦, 2008, 220쪽, 230쪽). 모든 만남이 신문발행 허가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신문발행 허가 청탁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적어도 이들이 총독이나 그 비서관장과 빈번한 접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총독부는 조선어신문의 발행허가에 앞서서 1919년 12월 5일에 〈북선일일신문〉, 〈호남신

문), 〈부산상업신문〉 등의 일본어신문의 발행을 허가했다<sup>12)</sup>(〈매일신보〉, 1919.12.10, 2면). 다음 해인 1920년 1월 6일에는 3개의 조선어신문의 발행을 허가했다. 전임 총독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2-3개 정도의 신문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을 참조하고, 신문을 신청한 세력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개의 신문발행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문제 중이던 조선인측 신문발행허가는 수(遂)히 이상협씨의 명의의 출원인 동아일보, 이동우씨 명의의 출원인 시사신문(협성구락부파), 예종석씨 명의의 출원인 조선일보(대정친목회파) 3종 신문을 허가하기로 되어 거(去) 6일 경기도청 제3부로부터 각 출원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였다(〈매일신보〉, 1920.1.8, 2면).

〈매일신보〉는 허가증의 명의자인 이상협, 이동우, 예종석만 거론했지만, 〈경성일보〉는 약간 다르게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박영효 일파, 〈시사신문〉은 민원식 일파, 〈조선일보〉는 대정친목회의 기관지로 허가했다고 하고는, 〈동아일보〉의 발행 겸 편집인은 이상협, 〈시사신문〉의 발행 겸 편집인은 이동우, 〈조선일보〉의 발행인 예종석, 편집인 최강이라고 보도했다(〈경성일보〉, 1920.1.8, 1면). 치바 료(千葉了, 1925)도 박영효 후작에게 〈동아일보〉를, 조중응 자작이 주재하는 대정친목회에 〈조선일보〉를, 민원식에게 〈시사신문〉을 허가했다고 회고했다(143쪽). 〈고등경찰관계연표〉에는 ‘내선인(內鮮人) 융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대정친목회의 기관지’로 〈조선일보〉의 발행을 허가했다고 나와 있다.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사장 김성수, 편집인 장덕수, 발행인 이상협의 한글신문(민족계)이라고 기록했고, 〈시사신문〉에 대해서는 ‘국민협회의 기관지인 시사평론의 전신’이라고 나와 있다<sup>13)</sup>(朝鮮總督府 警務局, 1930, 15-16쪽).

신문과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고려해 총 10여 개의 신문발행 허가 신청자 중에 3개를 결정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 경무국(1920.10.18)은 당시 정치세력을 동화파, 자치파, 독립파로 나누고, 세 세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김동명(2006)은 동화파를 동화형 협력, 자치파를 분리형 협력, 독립파를 저항운동 세력으로 분류했다(92-105쪽). 동화파가 일본과 조선의 동화

12) 1920년 이후에도 총독부는 〈경성일일신문〉 등 경성과 지방에서 여러 일본어신문의 발행을 허가해 재조일본인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정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김규환, 1978, 206-206쪽).

13) 〈고등경찰관계연표〉는 총독부 경무국이 1919년부터 1927년까지의 주요 사건을 정리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만든 것이다. 1930년에 발행할 때 해당 날짜의 사실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다. 1920년 1월 6일에 〈동아일보〉 창간을 언급하며, 사장을 박영효가 아닌 김성수로 기록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김성수는 박영효가 물러난 이후인 1920년 7월 1일에 사장으로 취임했다.



를 전제로 일본의회의의 참정권을 주장한 반면에 자치파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며 조선의회 설치를 통한 자치를 요구했다. 이 시기까지의 저항운동 세력은 주로 실력양성운동에 관심을 둔 민족주의자들로 아직 사회주의자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의 분화와 대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박찬승, 1992, 197-208쪽).

3개의 신문 중에 총독부가 가장 먼저 발행 허가를 결정한 것은 동화파의 <시사신문>이었다. 14)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했던 총독부에게 “정치적 효용성이 없었던 귀족을 대체할 신진 친일 세력”으로서 “완전한 국민적 동화를 추진한 국민협회는 가장 유력한 지원대상”이었다(이태훈, 2008, 111-112쪽). 동화주의 지배체제의 실현을 선전하던 일제에게 ‘동화주의 정책의 즉시 실행’을 요구하는 국민협회는 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기도 했다(김동명, 2006, 133-134쪽). 경무국 사무관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는 “조선의 사상선도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식을 상사에게 소개하거나 열심히 격려했다(松田利彦, 2004, 151쪽). 모리야 총독 비서관장도 민원식을 자주 만나며 국민협회에 대해 면담주선, 자금원조, 관직임용 등을 하며 지원했다(松田利彦, 2008, 230-231쪽). 민원식이 탄원서에서 스스로 국민협회를 ‘일종의 여당기관’이라고 했을 정도로 총독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齋藤實文書, MF 103-3) 쉽게 신문발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시사신문>은 일제가 친일여론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허용했던 것이다(강동진, 1980, 221쪽).

총독부는 나머지 친일 단체나 개인 중에 누구에게 신문발행을 허가할지를 고민했던 듯하다. 선우순은 매우 적극적으로 친일활동을 했지만 아직 개인적 차원의 활동에 머물렀고 주로 평양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15) 대정친목회를 대표한 한상봉과 별도로 신문 창간을 추진한 송병준이 비슷한 시기에 총독부 관계자들을 만나 신문발행 허가를 청탁했기 때문에 총독부는 둘 사이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고민했을 것이다. 총독부는 송병준이 대정친목회 회원이니(장신, 2010, 306-307쪽) 굳이 대정친목회 대신 송병준에게 허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한 송병준이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총독부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에도 신뢰

14) 박인식(2006)은 <시사신문>의 발행 허가일이 1919년 12월 4일이었다고 주장했다(44-47쪽). <고등경찰관계연표>에 발행 허가일이 1919년 12월 4일과 1920년 1월 6일 두 가지로 나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朝鮮總督府 警務局, 1930, 12쪽, 15-16쪽). <조선총독부 25년사>나 <조선총독부 30년사>에 “1919년 12월부터 1920년에 걸쳐 세 신문의 발행을 허가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도 근거가 되었다. 이런 내용은 비단 앞의 두 책만이 아니라, 사이토 총독 부임 1주년을 맞아 1920년 8월에 간행된 <朝鮮に於ける新施政>에서부터(朝鮮總督府, 1920, 11쪽) 총독부의 활동을 정리한 책에 계속 나온다. 박인식(2006)이, <시사신문>의 발행허가가 먼저 나왔으나 “친일계 신문 허가에 대한 조선 민중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공표를 보류”했다가 한꺼번에 허가증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것에는 일리가 있다.

15) 선우순은 1922년 7월에 가사야 대동동지회의 기관지로 <공영>이라는 잡지를 발행했다(이태훈, 2007, 235-236쪽).

를 받지 못했던 점도 작용했다(千葉了, 2003, 278-284쪽).

〈조선일보〉에 대한 신문발행 허가는 일부의 주장처럼 ‘자치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sup>16)</sup> ‘조선귀족’과 ‘친일 경제인’에 대한 배려에 가까운 것이었다.<sup>17)</sup> 일제는 강점 직후 조선인 76명에게 귀족 작위를 주었는데, 이 중 8명은 작위를 거부하였고 4명은 뒤에 독립운동과 관련해 작위를 잃었다(이용창, 2012, 356-365쪽). 계속 작위를 유지한 ‘조선귀족’ 64명 중에 9명이나 대정친목회에 참여했고, 특히 회장은 조중응(자작), 이윤용(남작), 민영기(남작), 이재극(남작), 권중현(자작) 등 귀족들이 창립부터 1933년까지 계속 맡았다. 이완용(백작)과 민영휘(자작)는 고문, 박제빈(남작)은 평의원을 맡았고, 간부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송병준(자작)도 회원이었다(장신, 2007, 373쪽).<sup>18)</sup> 일제는 작위 수여 이후 ‘조선귀족’에 대해 ‘상(上)으로의 충순(忠順)’과 ‘하(下)로의 모범(模範)’을 기대했다(심재욱, 2004, 244-257쪽). 친일세력 내에서 하나의 신문을 더 허가한다면 당연히 조선귀족이 주도하고 있는 대정친목회가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대정친목회의 다수는 경제인이었고, 이들은 금융이나 상업 분야의 간부들이었다(장신, 2007, 374-373쪽). 경제인들은 신문발행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실업계의 신문’을 강조했고, 이들 중 조진태나 예종석 같은 일부 언론인들이 신문의 경영을 전담했다. 한상룡은 “대정친목회 간부 몇 명에게 경영”을 맡겼다고 회고했다(한익교, 1941/2007, 183쪽). 〈조선일보〉는 1920년 8월에 “대정실업친목회와의 관계를 분리하고 주주의 독립 경영”에 나선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 1920.8.15, 2면).<sup>19)</sup> ‘대정실업친목회’라는 ‘조선일보의 경영을 책임지는 그룹’이 손을 떼고 “대정친목회 내에서 경영권을 조정”해 이사 유문환 등이 경영을 맡았던 것이다(장신, 2010, 304-305쪽).

국민협회가 ‘신세대 친일파 조선인’으로 구성된 정치단체로 동화파로서의 명확한 정치적 지

---

16) 조선총독부 경무국(1920.10.18)은 “일반인 사이에 동화파의 민원식에 대한 반감이 깊고 비난 공격이 많아서 그의 부하인 최강과 예종석이 동파(同派)의 형세가 불리하고 신변의 위험이 있다고 자치파로 전입(轉入)했다”고 보고했다. 최강과 예종석이 각각 〈조선일보〉 창간 당시 편집인과 발행인을 맡긴 했지만, 이 둘을 자치파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학문(1975)은 〈시사신문〉은 내지연장주의자, 〈조선일보〉는 자치주의자, 〈동아일보〉는 민족주의자에게 허가했다고 주장했다(76-77쪽). 그러나 〈조선일보〉를 발행한 대정친목회를 자치파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치파는 1919년 11월에 활동을 시작해 신문발행을 시도할 만큼의 세력을 형성할 수 없었다(김동명, 2006, 197-198쪽).

17) 김동성은 〈시사신문〉은 ‘친일파’, 〈조선일보〉는 ‘귀족층’, 〈동아일보〉는 ‘민족주의층’에 발행 허가를 해주었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960.1.4, 4면).

18) 이완용과 송병준은 〈조선일보〉 창간 당시 각각 백작과 자작이었으나, 1920년 12월 28일에 3·1운동에 대한 반대 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각각 후작과 백작으로 승진했다(〈매일신보〉, 1920.12.28, 2면).

19) 일제강점기의 〈조선일보〉에는 이때 딱 한 번 ‘대정실업친목회’라는 단어가 나온다(장신, 2010, 304쪽). ‘대정실업친목회’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신문이나 잡지에 한 번 더 사용된 적이 있다. “(경성의) 각 구에 명예 후 영리를 목적으로 대정실업친목회니 공우구락부니 그런 소간편이 있을 뿐이오”라는 표현에서 언급되었다(〈개벽〉, 1924년 6월호, 85쪽).

향을 가지고 있었다면(松田利彦, 2008, 231쪽), 대정친목회는 친일적인 귀족이나 경제인이 주축을 이룬 사교기관으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내세우지는 않았다. 다만 ‘내선융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동화파에 가까웠다고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인물로 구성된 국민협회는 〈시사신문〉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며 동화주의의 선전에 나섰다. 반면 상대적으로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로 구성된 대정친목회는 〈조선일보〉를 일부 경제인의 운영에 맡기며 선전활동의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다.

총독부로서는 3개의 신문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던 친일세력에게 허용할 수는 없었다. 1개 정도가 실력양성론자들인 ‘민족주의 우파’(박찬승, 1992)를 대상으로 했을 텐데, 이들 중 신문발행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모여 하나의 신문을 신청하도록 했던 것이다(진학문, 1975, 77-78쪽). 상해로 망명했거나 3·1운동으로 감옥에 갇힌 인물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 없었을 테니, 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는 저항세력이라고 보기 어려웠지만 ‘소극적 저항’의 가능성을 가졌다고는 볼 수 있던 인물들이었다. 총독부는 친일세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항적이지도 않은 세력에게 〈동아일보〉의 창간을 허용하면서 민족주의 세력에게도 신문발행을 허용했다는 홍보 효과를 누리면서 동시에 민심의 파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저항적 성격을 지녔던 〈동아일보〉에 대해 재조일본인들은 비판을 했던 것이다.

1920년 1월에 마루야마 쓰루키치 경무국 사무관과 모리야 총독 비서관이 조선인 유지들과 회합을 했는데, 이 자리에는 동화파의 민원식과 고희준이 참여했고, 〈동아일보〉 창간에 합류한 김성수, 장덕수, 진학문도 참석했다(이형식, 2017, 440쪽). 사이토 총독의 개인적 정치고문이었던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는 1920년 5월 초에 조선을 방문해 동아일보사의 김성수, 장덕준, 김명식 등과 밤늦게까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했고, 조선일보사의 많은 인물들로부터도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이형식, 2018, 37쪽). 동화파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하던 모리야 비서관이나 실력양성론자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아베 전 〈경성일보〉, 〈매일신보〉 사장이 공통적으로 동아일보사의 주요 인물을 만난 것은 그만큼 문화정치의 실시를 위해 이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즈노 정무총감도 “조선어신문을 허용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젊은 관리와 젊은 조선인들이 흥금을 터놓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는 조선인의 사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朝鮮行政編輯總局, 1937, 209쪽).

## 2) 조선어 민간신문의 창간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

총독부가 조선인에게 3개의 신문발행을 허용하자 조선인 사이에는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다. 윤치호는 신문들이 창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20년 4월 30일 일기에서 “지금 서울에서 조선인

들이 경영하고 있는 신문은 3종이나 된다. 독립을 추구하는 동아일보, 동화정책을 선도하는 시사신문, 중도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조선일보말이다. 그중에서 동아일보가 조선인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높다"고 기록했다(김상태, 2001, 173쪽). 윤치호는 1919년 7월 20일에 결성된 친일단체 교풍회의 회장이 되었는데, 교풍회에는 대정친목회의 한상룡(부회장), 조진태(고문), 얼마 뒤 협성구락부를 결성하는 민원식(고문) 등도 참여했다(강동진, 1980, 221쪽). 윤치호는 <동아일보>는 '독립파, <시사신문>은 '동화'파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조선일보>는 '중도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치호와 달리, <개벽>의 한 필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민주주의를 고조하고 생의 창달을 절규하여 현 정치-조선총독정치-의 결합을 완부(完腐)가 없도록 결척(抉剔)하였으므로 당국은 이를 조선독립을 고취하는 배일신문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근일 색채는?) 시사신문은 신일본주의를 제창하고 조선인의 참정권을 요구함으로써 일부 독자인 국민협회 회원을 제하고는 모두 구독을 거절하여 문미(門楣)에 시사신문 불견(不見)이라 특서한 지편을 첨부하는 기현상을 정(呈)하며 현명한 당국자도 이를 타자에 치(置)할 뿐이오 태(殆)히 불원하여 불견신문이라는 독특한 명칭을 여(與)하였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어떠한가? 조선일보는 말하자면 표면으로는 조선인의 경제생활을 주안으로 하여 실업적 색채를 띠고 이면으로는 은연한 일선동화주의를 포용하였다. ... 원래 조선일보는 대정친목회에서 발기한 것이다. 총독의 송별 환영과 일본 귀족의 만선 시찰에 초대 연회나 하는 것이 그 회의 사업이오, 아울러 그 회의 존재를 표시하는 것이다(신철, 1923, 45-46쪽).

이 필자는 <동아일보>를 '배일신문'이라고 하면서도 '근일 색채는?'이라고 하며 논조의 변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사신문>은 아예 사람들이 읽지 않는 '불견신문'이라고 비판했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실업적 색채'를 띠면서도 '은연한 일선동화주의'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개벽> 같은 호의 다른 필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창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조선 주의(周衣)에 일본 하오리를 가미하여 문부(紋付) 예복을 입고 다니는 괴물의 일군이 있었는데 만세 일성에 대경각법(大驚愕法)하여 서혈(鼠穴)에 잠복하게 된 망종이 있다. 이것을 알 대정친목회라는 것인데 조선총독부에서 만세성(萬歲聲) 중에 불평 청년에게 동아일보를 허가하면서 차(此)와 대치할만한 민간신문을 허가함에는 대정친목회 일군(一羣)에게 준 것이 교묘한 방책이었다. 그것이 곧 조선일보의 탄생한 유래라(이아생, 1923, 50쪽).

〈동아일보〉는 ‘불평청년’에게 허가했다고 하고, 〈조선일보〉 발행 허가를 받은 대정친목회는 3·1운동에 놀라 ‘쥐굴에 숨은 망종’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동아일보〉와 대치시킬 목적으로 창간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평가는 이미 1921년 3월에 〈시사신문〉이 폐간되고, 두 신문만 발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두 신문의 대립 구도를 보고 나온 평가였을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가 최초 발생할 당시에 결코 금전이나 모략으로만 성립된 것이 아니다. 3·1운동의 만세성(萬歲聲)이 전국을 진동하여 5만인의 대중이 옥중에서 신음할 때에 옥외에 잔존한 전도의 우국지사가 상호(相孚)하여 불일(不田)에 차(此)를 성(成)한 것”이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다(벽아자, 1923, 41쪽). 반면 대정친목회의 신문 창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경제적 목적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재등 총독이 문화정치를 선언하자마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천재일시(千載一時)로 여기고 조선일보 창립을 도모하였다. … 최초로 신문 발간 계획도 사회와 민중을 위하여 지도계발을 뜻함이 아니고 오직 어찌어찌 지내다가 작자나 나서면 (당국자도 포함된 듯) 권리 값을 푸른히 받고 조선일보를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어 그리하였다고 하는 풍설도 있었다(신철, 1923, 46-47쪽).

창간과 운영을 주로 경제인이 주도했고, 실제로 창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권을 팔려고 했던 것을 보고 나온 주장이다. 신문 창간을 시도했고, 1921년 4월에 〈조선일보〉를 인수했던 송병준도 ‘민심을 지도’하겠다고 신문발행 신청의 이유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대정친목회와 마찬가지로 신문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실현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송병준은 “대정친목회에서 6,000원의 월가로 조선일보를 매수하여 가지고 인계 초부터 고리를 부(付)하여 5만원, 10만원, 내지 13만원의 고가를 호(呼)하여 고물 경매자처럼 사방으로 원매자를 구하기에 분망하더니 근간에 다행히 신석우군의 모모씨에게 80,000원 거금에 매각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개벽〉, 1924년 10월호, 81쪽).<sup>20)</sup>

세 신문에 대해 “이상협씨의 모모씨의 말기한 동아일보”와 함께 ‘대정친목회의 경영’인 〈조

20) 〈고등경찰관계연표〉에는 〈조선일보〉의 “8백주를 3천원에 송병준에게 매각했다”고 나와 있다(朝鮮總督府 警務局, 1930, 15쪽). 송병준은 1921년 7월 2일 모리아 총독 비서관과 만나 신문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이규수, 2017, 447쪽). 송병준은 많은 재산이 있었음에도 축재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급격히 몰락했고, 〈조선일보〉의 매각도 3년 반 정도의 경영 기간 동안의 적자로 큰 이익을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이기훈, 2006, 348-353쪽).

선일보)와 ‘국민협회 기관지’ <시사신문>이 창간되었다는 주장도 있다(수춘학인, 1930, 27쪽). 이 필자는 <시사신문>은 국민협회의 ‘기관지’라고 표현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대정친목회의 ‘경영’이라고 표현했다. <시사신문>이 국민협회 기관지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했던 반면에 <조선일보>는 단순히 대정친목회 회원이 경영을 맡았던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었다.

하정(1934)은 <조선일보>는 “사장 조진태씨와 예종석, 송병준씨 등을 중심으로 창간되었다”고 하며 대정친목회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동아일보>는 “사장 박영효씨, 주주대표 김성수씨와 유근, 장덕수, 이상협씨 등을 중심으로 창간되었다”고 하며, “일반 독자의 반향과 지지는 컸었다”(57쪽)고 주장했다. 차상찬(1935)은 <조선일보>는 “조진태, 송병준, 예종석, 최강 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되었다. 동지는 최초 대정친목회 기관지로 실업신문을 표방”(10쪽)하고 나왔다고 했다. 또한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최초 사장이던 박영효, 주주대표 김성수, 유근, 이상협, 장덕준씨 등을 중심으로 창간된 것”으로 “민족주의 사상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때라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등의 세 가지 강령을 가지고”(9쪽) 나왔다고 했다. 두 글 모두 <조선일보>의 창간 과정에 송병준이 참여한 것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많은 글들에서 같은 내용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는 창간 1년 후 송병준이 인수했던 것을 착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두 글 모두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호응이 컸던 것으로 평가했다.

1930년대에는 세 신문의 창간이 정치세력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왔다. 황태욱(1935)은 “재등 총독은 당시 각 방면의 말을 균등히 듣는다는 의미로 민족주의편으로 이상협에게 동아일보, 신일본주의 민원식에게는 시사신문, 당시 일선(日鮮)동화에 힘쓰는 단채라는 대정친목회 예종석에게 조선일보를 허가하여 각각 상응 발달을 하며 성장하는 것을 보려 하였다”(14쪽)고 주장했다. 차상찬(1936)도 “각 방면 균등주의를 써서 그때 민족주의편으로는 이상협 일파에게 동아일보, 일선동화주의 대정친목회의 예종석에게는 조선일보, 신일본주의 국민협회 민원식에게는 시사신문”(48쪽)을 허가했다고 평가했다. 임우성(1938)도 “당국에서는 소위 방면균등주의를 써서 당시 민족주의편으로는 김성수, 장덕수, 김명식 일파에게 동아일보, 일선동화주의를 표방한 대정친목회의 예종석에게는 조선일보, 신일본주의 국민협회의 민원식에게는 시사신문을 허가하게 되었었다”(6쪽)고 주장했다. 세 글 모두 ‘방면균등주의’라는 관점에서 <동아일보>는 민족주의자, <조선일보>는 일선동화주의자, <시사신문>은 신일본주의자에게 허가했다고 보았다. 이런 평가에는 일제가 신문발행 허가 과정에서 ‘친일’ 세력에게 2개, ‘민족주의’ 세력에게 1개의 신문을 허가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다.<sup>21)</sup>

그러나 이외는 달리 “허가해 준 세 신문이 하나는 송병준의 대정친목회에 배경을 두고 하나는 민원식의 유업(遺業)인 국민협회가 산모요. 나머지 하나가 좀 어떨까 했으나 그 역시 후작 박영효씨를 사장으로 하고 매일신보의 각 기자들이 편집에 앉았으니 표면으로야 온건착실한 편이었”다고 하는 평가도 있었다(무명거사, 1931, 77쪽). 마찬가지로 이종수(1931)도 “기미(己未) 이후 무단정치의 정책을 고치고 해군대장 채등씨가 문화정치의 간판을 들고 나왔으니 그리하여 신문을 허가해 준 사람은 후작 박영효씨(동아일보), 대정친목회의 송병준(조선일보)과 국민협회의 민원식, 김환(시사신문) 등이었다. 그 허가하는 표준의 정도를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73쪽)라고 주장했다. 두 글 모두 박영효 이름 앞에 ‘후작’이라는 단어를 붙여, 〈동아일보〉도 창간 당시 다른 두 신문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를 통해 적어도 일제강점기까지는 〈동아일보〉에 대해 ‘민족주의’ 신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4. 맺는 말 : 의도와 결과의 차이

일제는 “문화정치가 노리는 기만과 회유의 고등 술책의 일환”으로 1920년에 조선어 민간신문의 발행을 허가했다(최민지, 1978, 42쪽). 무단통치시기에 축적된 조선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신문발행을 허가하고, 그런 신문을 통해 민심을 파악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일제는 우선 몇 개를 허가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을 텐데, 이에 대한 다음의 지적이 의미가 있다.

어째서 세 개일까? 하나만은 대내외적으로 명분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게 성장할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둘을 두는 것은 서로 분열·경쟁을 유발시키기에 미흡하고 보니 셋으로 한정하여 민족 내부의 분열도 조장하고 피차의 경쟁 유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지는 생각에서 나온 계략이었던지도 모르겠다. 하나의 추측이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새로운 민간지를 그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한인에게 허가하고 싶었으리라고 하는 것도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임근수, 1984, 249-250쪽).

21) 해방 이후 이런 인식을 다시 최초로 언급한 것은 최준이다. 최준(1960)은 “각 방면의 세력균등주의라는 미명하에 2대 1의 율(率)로써 친일계 신문으로 하여금 민족진영 신문을 억압하려는 총독부 당국의 치밀한 계획”(201쪽)이었다고 주장했다.

일제는 3·1운동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도, '분열과 경쟁을 유발'하기에 적절한 신문의 수까지 따져보고 전체적인 구도를 짜서 신문발행을 허가했다. 일제는 "면밀한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문화정치'의 구도와도 부합"되는 집단이나 세력에게 신문발행을 허가하려고 했던 것이다(김경택, 1998, 59쪽). 다양한 조선인 집단이나 개인들은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의도 등을 갖고 신문발행 허가를 신청했다. 일제에 협력적이든 저항적이든 일단 총독부의 요구나 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했다. 모든 집단이나 세력이 적어도 겉으로는 민심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신문발행을 허용해 달라고 했던 것은, 총독부의 통제 범위 내에서 문화정치의 구도를 존중하며 언론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민지의 주장은 일제가 누구에게 신문발행을 허용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어도 일제가 제창하는 식민정책에 부응하거나 일제의 조종에 놀아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무리라고 판단하였거나 기업이윤의 확보나 출세주의 때문에 일제에 저항하기보다는 타협할 것으로 판단되었거나 충분히 일제의 한반도 경략에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 나머지 허가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최민지, 1978, 49쪽).

총독부는 적극적 협력세력 중에 2개, 소극적 저항세력 중에 1개의 신문발행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협력세력 중에는 '신세대 친일파'로서 동화주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쳤던 국민협회에게 <시사신문>을 허가했고, '구세대 친일파'인 귀족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로서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사교활동을 했던 대정친목회에 <조선일보>를 허가했다.<sup>22)</sup> 이런 두 신문의 구도는 대한제국시기에 일진회의 기관지 <국민신보>와 이완용 내각의 기관지 <대한신문>이 '친일 경쟁'을 했을 때와 유사한 것이었다. 저항세력 중에는 민족주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타협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놓인 세력에게 <동아일보>의 발행을 허가했다. 당시 잡지의 필자들이 국민협회 기관지 <시사신문>과 대정친목회 기관지 시절의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다. 다만 <동아일보>의 창간 시절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족주의적이었다는 평가와 사장 박영효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두 신문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그러나 일제가 조선어신문 발행을 허가하며 의도했던 것들이 모두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았

22) 마츠다 도시히코(松田利彦, 2008)는 송병준 등 강점 이후 작위를 받은 귀족을 '구세대' 친일파로, 민원식 등 강점 직후 하급 관리를 지낸 부류를 '신세대' 친일파로 불렀다(230-231쪽).



다. <시사신문>은 사장 민원식이 1921년 2월 16일에 양근환에 의해 처단당한 후에 근근이 발행되다 3월 3일부터 휴간을 한다고 밝혔으나(<동아일보>, 1921.3.4, 3면) 결국 폐간되었다. 대정친목회는 1921년 4월에 <조선일보>의 판권을 송병준에게 넘겼고, 송병준은 1924년 9월에 신석우에게 다시 판권을 매각했다. <동아일보>는 일정한 역할을 기대했던 박영효가 창간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1920년 5월 19일에 사임하고 말았다.

일제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왔던 데는 일차적으로 당시 민중들의 신문에 대한 기대가 작용했다. 3·1운동의 영향이 남아 있던 1920년대 초반에 일제에 대해 협력적인 논조를 보이는 신문이 독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는 없었다. 또한 민족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인물들이 기자가 되었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는 이들이 때로는 경영진과 충돌하며 저항적 언론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비록 창간 당시 의도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조선어 민간신문이 발행되던 20년 동안 일제는 창간 당시의 언론지형과 언론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시사신문> 이후 <시대일보>의 최남선, <중외일보>의 이상협, <중앙일보>의 노정일 등 타협적이거나 친일적 인물들에게 계속 신문발행을 허가했고(정진석, 1990, 412-428쪽), 상황에 따라 허용 가능한 논조의 수위를 조절하며 이런 수위를 넘어설 때는 강력히 통제했다.

조선어 민간신문들은 창간 당시 총독부가 구축한 언론구조와 언론통제의 벽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조선어 민간신문들은 일제의 통제와 민중의 기대 사이에서 때로는 저항적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일제강점기 내내 창간 당시의 한계를 조금씩 양상을 달리 하며 계속 드러냈고, 통제가 강화된 일제말기에는 노골적으로 친일 논조까지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창간 100주년을 앞두고, 창간 당시 '실업지'였음을 강변하는 <조선일보>는 물론 '민족지'였음을 주장하는 <동아일보>의 일제강점기의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동진 (1980). <일제의 한국침략사>. 서울: 한길사.
- 고명식 외(1987). <대기자 흥박>. 서울: 세문사.
- 김경택 (1998). <1910·20년대 동아일보 주도층의 정체경제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규환 (1978). <일제의 대한 언론·선전 정책>. 서울: 이우출판사.
- 김동명 (2006).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서울: 경인문화사.
- 김민환 (1993). 일제강점기 언론사의 시기구분. <언론과 사회>, 1호, 46-66.
- 김상태 (편) (2001). <윤치호 일기(1916-1943)>. 서울: 역사비평사.
- 김유원 (1986). 민족지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청암 송건호선생 화갑기념문집>(389-408쪽). 서울: 두레.
- 김을한 (1971). <신문야화>. 서울: 일조각.
- 김종준 (2010).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서울: 신구문화사.
- 동아일보사 (1985. 4. 17). 애독자 제현에게 알려드립니다-동아·조선 창간과 '민족지' 시비에 대하여. <동아일보>, 3면.
- 동아일보사사 편찬위원회 (1975). <동아일보사사> 권1. 서울: 동아일보사.
- 무명거사 (1931). 조선신문계 총황담. <동광>, 1931년 12월호, 76-80.
- 박경식 (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서울: 청아.
- 박용규 (2015). 1920년대 초 <시사신문>의 창간과 특성. <한국언론학보>, 59권 5호, 178-204.
- 박인식 (2006). 일제하 3대 민간지인 시사신문 허가일 재규명. <신문과 방송>, 2006년 3월호, 44-47.
- 박지향 (2009). 협력자들과 나치점령기 유럽과 일제치하 조선. <서양사론>, 103호, 343-374.
- 박찬승 (1992). <한국 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백약산인 (1938). 복면객의 인물평-권토재래의 이상협씨. <삼천리>, 1938년 12월호, 42-48.
- 백야자 (1923). 동아일보에 대한 불평. <개벽>, 1923년 7월호, 40-44.
- 선우희 (1985. 4. 12). 동아일보 사장에게 드린다. <조선일보>, 3면.
- 수춘학인 (1930). 조선신문잡지 연혁 및 발달사. <별건곤>, 1930년 7월호, 22-27.
- 신 철 (1923). 소위 팔방미인주의인 조선일보에 대하여. <개벽>, 1923년 7월호, 45-49.
- 신홍범 (1985). 동아·조선의 뿌리. <실천문학>, 7호, 83-101.
- 심재욱 (2004). 1910년대 '조선귀족'의 실태. <사학연구>, 76집, 231-265.
- 아야생 (1923). 조선일보의 정체. <개벽>, 1923년 7월호, 49-52.
- 유광열 (1960). 동아일보기 창간되던 무렵. <사상계>, 1960년 1월호, 212-217.

- 유광열 (1969). <기자반세기>. 서울: 서문당.
- 윤해동 (2010). <근대역사학의 황혼>. 서울: 도서출판 책과 함께.
- 이규수 (2005). 조선총독부 치안관계자의 한국 인식. <동학연구>, 18집, 167-193.
- 이규수 (2009). 민본주의자,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조선 인식. <역사비평>, 87호, 303-323.
- 이기훈 (2009). 1920-30년대 '조선귀족'의 경제상황과 조선총독부의 귀족정책. <역사문제연구>, 21집, 333-363.
- 이민주 (2011). 일본어 잡지기사에 나타난 일제하 언론정책과 언론상황.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30-55.
- 이승엽 (2012). '문화정치' 초기 권력의 동학과 재조일본인사회. <일본학>, 35집, 91-118.
- 이 연 (2013). <일제강점기 조선언론통제사>. 서울: 박영사.
- 이완범 (2009). 김성수의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과 협력: '협력적 저항'에서 '저항적 협력'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집, 399-454.
- 이용창 (2012). 일제강점기 '조선귀족' 수작 경위와 수작자 행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집, 331-371.
- 이종수 (1931). 조선신문사-사상변천을 중심으로. <동광>, 1931년 12월호, 69-75.
- 이태숙 (1990). 제국주의와 주변부 중심론. <역사학보>, 128집, 71-100.
- 이태훈 (2007). <공영>-1920년대 전반 친일세력의 고민과 세계관. <역사문제연구>, 17호, 235-256.
- 이형식 (2017). '제국의 브로커'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문화통치. <역사문제연구>, 37호, 433-480.
- 이형식 (2018). <齋藤實·阿部充家 왕복서한집>. 서울: 아연출판부.
- 인촌기념회 (1976). <인촌 김성수전>. 서울: 인촌기념회.
- 임근수 (1984). <언론과 역사> 서울: 정음사.
- 임우성 (1938). 조선신문사. <비판>, 1938년 8월호, 2-10.
- 임종국 (1985). <일제하의 사상탄압>. 서울: 평화출판사.
- 장 신 (2007).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 <대동문화연구>, 60집, 361-392.
- 장 신 (2010). 1920년 대정친목회의 조선일보 창간과 운영. <역사비평>, 91호, 291-327.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정진석 (2005). <언론조선총독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선일보사 (1985.4.19). 우리의 입장-동아일보의 본보 비방에 붙여. <조선일보>, 3면.
- 조용만 (1985.4.1). 동아일보 민족혼 일깨운 탄생, 본보 창간의 시대적 배경. <동아일보>, 3면.
- 조좌호 (1996). 산운 장도빈의 생애. <산운 장도빈의 생애와 사상>(19-23쪽). 서울: 산운학술재단.
- 진학문 (1975). 나의 문화사적 교류기. <순성 진학문 추모문집>(72-87쪽). 서울: 순성 추모문집 발간위원회.
- 차상찬 (1935). 조선신문발달사. <개벽>, 1935년 3월호, 2-12.

- 차상찬 (1936). 조선신문발달사. <개벽>, 1936년 11월호, 40-52.
- 채 백 (2012). <부산언론사연구>. 부산: 산지니.
- 채 백 (2015). <한국언론사>. 서울: 컬처룩.
- 최민지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 최 준 (1960). <한국신문사>. 서울: 일조각.
- 하 정 (1934). 조선신문발달사. <신동아>, 1934년 5월호, 52-59.
- 황태욱 (1935). 조선 민간신문계 총평. <개벽>, 1935년 3월호, 13-21.
- 國民協會本部(1921). <國民協會史>第一.
- 関元植(1920). 騷擾先後策. <朝鮮統治問題>(35-74쪽). 東京: 黒龍會本部.
- 朴仁植(2007). 植民地朝鮮における民間二紙許可の政治的意圖. 東京: 富士ゼロックス小林節太郎記念基金.
- 釋尾春菴(1920). 文化政策の價値を疑はる. <朝鮮及滿州>, 1920년 9월호, 2-5.
- 松田利彦, 김인덕역(2004).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서울: 국학자료원.
- 松田利彦(2008). 朝鮮總督府秘書課長と文化政治. <日本の朝鮮, 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213-235쪽). 東京: 國際日本文化センター.
- 原奎一郎 編(1950). <原敬日記>. 東京: 乾元社.
- 李炯植(2006). 初期における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史學雜誌>, 115권 4호, 510-534.
- 朝鮮行政編輯總局(1937). <朝鮮統治秘話>.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 朝鮮總督府(1920). <朝鮮における新施政>. 京城: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 警務局(1910.10.18) 高警第26490號 <京城民情彙報: 民心の傾向, 獨立資金募集者 檢舉>  
([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JS\\_0004\\_00000116](http://e-gonghun.mpva.go.kr/portal/url.jsp?ID=PV_JS_0004_00000116))
- 朝鮮總督府 警務局(1930). <高等警察關係年表>. 京城: 朝鮮總督府 警務局.
- 千葉了(1925). <朝鮮獨立運動秘話>.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 千葉了(2003). 3.1事件後の朝鮮に赴任して(秘話豊談). <東洋文化研究>, 제5호, 241-336.
- 韓翼敎(1941). <韓相龍君を語る>. 김명수(2007). <한상룡을 말한다>. 서울: 해안.
- Osterhammel, Jürgen(2002). *Kolonialismus : Geschichte, Formen, Folgen*. 박은영, 이우재 역  
(2006). <식민주의>. 서울: 역사비평사.

최초 투고일 2018년 8월 10일  
 게재 확정일 2018년 9월 28일  
 논문 수정일 2018년 10월 04일

Abstract

# Backgrounds and Processes on the Foundation of Korean private newspapers in 1920

**Yong-Gyu Park**

Professor, Sangji University

In the aftermath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the Japanese Imperialist was forced to implement 'cultural politics', allowing some freedom of speech. In order to assuage the Korean people's discontent,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approved the publication of newspapers in 1920 and tried to grasp public sentiment or manipulate public opinion. The Governor-General gave permission to publish newspapers by forming the overall structure, even considering the right number of newspapers to cause division and competition. Various groups and individuals of Koreans applied for permission to publish newspapers with political or economic intentions. The Governor-General approved the publication of two of the active collaborators and one of the passive resistance forces. The authors of the magazine were consistently critical of *Shisa-Shinmoon* and *Chosun-Ilbo*. However, there was mixed opinion that *Dong-A Ilbo* was relatively nationalistic or that *Dong-A Ilbo* wa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two newspapers at the time of the foundation.

**Keywords:** the foundation of Korean private newspaper, cultural politics, Dong-a Ilbo, Shisa-Sinmoon, Chosun Ilbo